

여야 대치에 개회 결정도 못한 '2월 국회'

野 '특검·청문회·해임결의안' 요구에 與 '수용 불가'
민생법 논의 읊스툼... 오늘 원내대표 회동 정상화 논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2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가 여야의 쟁점 사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오는 17일로 회기가 종료된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아 1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다. 이 때문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입세율법', 유치원 3법, 체육계 폭력 근절법 등 민생법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의 처리도 불발됐다.

이제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새해 들

어 각종 갈등 이슈가 쉴 틈 없이 불거지면서 정국이 팽팽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서 시작해 한국당 곡상도 의원의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 제기 등까지 여야는 곳곳에 전선들을 형성해냈다. 특히 '드루킹 사건'에 따른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실형 선고 이후 야당은 대선 정당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지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대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관련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관위 임명철회 등 한국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여당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대담을 들은 뒤 2월 국회 보이콧을 해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해주 위원 해임추구결의안 절차 진행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해주 해임추구결의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밟는 것으로 국회 보이콧은 풀고, (여야가 대치하는) 김경수 지사 사건은 철저히 법원에 맡겨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양보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받을 텐데, 야당의 요구는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

고 말했다. '김태우 폭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말 야당의 요구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없었으며, 조해주 위원 문제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기 위해 기다렸는데도 야당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 간 극적 합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내년 4월 총선 대비체제에 돌입하면 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할 기회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민생입법이 미진하고 타협정치가 실종됐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7일 오전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총선을 4월까지 확정"

민주당 대표 전국 대의원에 설 메시지... "총선 준비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오는 4월까지 총선을 확정지어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날을 맞아 이날 전국 대의원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의 혁신과 미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은-오프가 결합한 정당 플랫폼을 이룬 시일 안에 선보이겠다"면서 "당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책 전달대회'와 '정책엑스포'를 개최해 민생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올해는 3·1 혁명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고, 고(故)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가 되는 해로 대한민국과 민주당에 대단히

중요한 해"라며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전 당·정·청의 혼연일치로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시켰듯 올해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당 운영,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달 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지금의 평화국면은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70년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또...한국당 "전대 날짜 고민되네"

27일 북미정상회담 일정 겹쳐 변경 검토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어 왔다. 오는 2·27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면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도 당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당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변수로 계파와 TK 표심, 여론조사를 꼽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등 계파 프레임은 옛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계의 경쟁에서 분화된 이래 십여년간 당내 선거를 좌지우지했다.

이번에는 김진태-정우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친박계 주자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가 비박계 주자로 거론된다. 따라서 대선 주자급인 오세훈-홍준표-황교안 등 '빅3'의 대결에서는 황 전 총리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다.

한국당 전체 책임당원은 약 34만명이 다. 이 중 30%가량의 책임당원이 대구·

경북(TK)에 포진하고 있다. 그동안 투표율이 높았던 TK 표심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70%)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산출된다. 선거인단은 약 40만명인 데 비해 여론조사는 3000명을 응답자로 하기 때문에 응답자 1명의 표 가치는 선거인단 1명의 57배가량이다. 박빙 상황이라면 여론조사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27 전당대회 날짜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자 전당대회 날짜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박관용 전국회의장은 "당의 터닝포인트가 될 전당대회가 북미회담에 밀리면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당 사무처에 내일(7일) 회의를 열어 날짜를 당기거나 미루는 것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창당 1년' 바른미래, 끝나지 않는 '정체성 갈등'

개혁 보수 vs 중도 개혁 충돌
8~9일 연찬회서 정체성 토론
생존 위한 통합론 대두 전망

오는 13일로 창당 1주년을 맞는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당 정체성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내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민주당화합과의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종우 대표가 '중도개혁'을 말하는 국민의당 출신들 간에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8~9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의원 연찬회는 바른미래당에 있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 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끝장 토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중도개혁'을 당의 좌표로 삼고자 하는 손학규 대표와 '개혁보수'를 추구하는 유 전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동에서 견해를 노출, 이번 연찬회에서 당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는 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박주선 전 공동대표, 김동철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설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교통공사 도봉차량사업소를 찾아 전기차 하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중진의원들이 최근 민주당화합과 당대 당 통합 논의를 공론화할 방침이어서 이번 연찬회가 '화합의 장'이 아닌 '충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창당주역인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를 향해 각각 조기 복귀와 당 활동 재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들은 현 지도부 체제에서 전면에 나서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통합파 의원들은 오는 12일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통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황주홍 의원은 6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날 토론회는 미래당과 평화당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야당의 통합파 의원들은 물론 손학규·정동영 대표와 김관영·장병완 원내대표 등의

참석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현재 상태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모두 내년 총선에서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적 차원의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뚜렷한 구심점과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통합론에 힘이 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혁신자문위 "매달 임시국회 열자"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문화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국회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최근 회의에서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방안'을 의결했다.

혁신자문위가 상시국회를 제안하기로 한 것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

하거나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가 아닐 때도 계속해서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임야 단독 섬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문의. 010-6834-7400

다스코인 세라코인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 1기 이상 보유(태양광 500kW 이상)
 - 태양광발전소 1기 이상 보유(태양광 500kW 이상) 소유하고 있으나 운영하지 않은 사업주
 - 태양광발전소 1기 이상 보유(태양광 500kW 이상) 소유하고 있으나 운영하지 않은 사업주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영업 경험이 풍부하다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임 받은 사람
 -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한 지역(태양광발전소 사업지역)
- 태양광 영업 인체 모집**
 - 태양광 영업 경험이 풍부하다
 - 태양광 영업 인체 모집
 - 태양광 영업 인체 모집

ONE-STOP TOTAL SOLUTION

부 문	담당 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순
	영업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 라 코	수령관리	수령관리	나주
	영업	영업	

문의: 010-6834-7400, www.dascoco.kr, www.seraco.kr

1566-9988

돈보기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안과